

“尹정부,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의지 부족하다”

작년 이용객 1천326만명, 2021년 비해 16% 상승 같은 기간 여객선 수는 148대로 오히려 16대 감소 서삼석 “섬 거주민 교통 기본권 침해 받아선 안돼”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대로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 섬은 총 464곳 중 253곳으로 2년 전인 20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장관은 한목소리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 개발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제발의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기존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 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의 견조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김진수 기자

민주 여순사건특위, ‘작성기획단’ 재구성 요구

완료 기한 3개월도 안 남아...실무 인력 보장 시급 주철현 “尹정권 퇴행으로 여순사건도 총체적 부실”



및 중공’ 등 제목에서부터 여순사건에 대한 편향된 역사 기술과 왜곡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위촉직 단원의 상당수가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 업무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용역 발주마저도 1차 공고에 이은 재공고까지 전부 유찰

되며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아 법정 기한까지 보고서 작성 준비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해 신속한 실무 인력 보장을 요구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팀’은 정부와 지자체 파견(3명), 전문임기제(2명), 기간제(1명) 등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철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잇따르는 반역사적인 퇴행이 여순사건까지 이어진 결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마저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 있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번 달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직접 요구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는 1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이날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청사항을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 사항은 크게 3개다. 특위는 먼저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단장을 포함한 다수의 작성기획단 구성원들은 극우·친일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단체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 망언으로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특위는 또 작성기획단이 결정한 진상조사 과제들을 전면 재설정하고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

에 맡기는 무책임한 ‘외주화’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작성기획단이 결정한 20개 진상조사 과제들은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 ‘14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좌익단체의 개입범위와 역할’, ‘14연대 반란과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 범위와 역할’남로당과 북한, 소련



발언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 지방정부 책임강화 ‘필수의료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비례·사진)은 11일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갖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필수 의료 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인력을 파견·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필수의료수가도 의료 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가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 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의료와 심뇌혈



관질환 및 분만·소아 진료 등에 쓰이는 ‘전문센터 가산’으로 세분화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필수 의료 영역 정책 등을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3개 법안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정준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고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재건축의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재초환법 시행 이후 부과 대비 납부된 금액이 미비하고 법 개정 이후 환수액이 제대로 책정·부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재



초환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초환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초과 이익을 통한 부담금이 국민에게 제공된 편익과 재건축 사업성이 약화된 두 지점을 비교해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